

2015 서울 9급 행정학개론

해설 : 방성은 교수(월비스고시학원 행정학 전임교수)

< 총 평 > - 2015 올해 국가9급과 2014 서울9급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쉽게 출제되어 기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고득점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 출제자의 악어거북 행태(지문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부정확한 인과관계로 수험생을 현혹시키는 출제행태)에 속지 말라고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하였는데 2번 ④ 역사적 신제도론 지문, 10번 ③ 자원의존이론이 전형적인 악어거북 행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점을 간파하고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으므로 기본개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문제였습니다. - 기본개념을 연계하여 응용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0번은 조정교부금의 기본개념(특별시, 고광역시가 보통세의 일부를 교부)과 지방세의 종류(보통세와 목적세)를 연결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조정교부금의 정확한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었습니다. - 6번 정책의 직접성 문제는 쉽게 출제되어 다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 편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지방직 특성상 6편 지방행정이 많이 출제되고 7편 행정 책임·통제·개혁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

1. 윌슨(J.Q.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해설 : ㉠은 대중적 정치, ㉡은 고객정치, ㉢은 기업가적 정치, ㉣은 이익집단정치이다.

①(x) : ㉠은 대중적 정치가 맞지만,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는 소수 기업에게는 비용이 집중되는 반면, 다수인 소비자에게는 편익이 분산되므로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된다.

②(o) : ㉡ 고객정치 - 수입규제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아주므로 소수인 국내기업에게는 편익을, 다수인 국내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값이 저렴한 외국제품을 소비할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비용을 부담하므로 고객정치에 해당된다.

③(x) : ㉢은 기업가적 정치가 맞지만, 낙태규제는 다수인 미혼모에게 비용이 분산되는 반면, 다수인 신생아에게는 편익이 분산되므로 대중적 정치에 해당된다.

④(x) : ㉣은 이익집단 정치가 맞지만,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는 소수인 농산물생산자에게는 편익이 집중되는 반면 다수인 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분산되므로 고객정치에 해당된다.(2015 비타민행정학 51페이지)

답 : ②

3. 윌슨(J.Q.Wilson)의 규제정치론 - 2015 비타민행정학 51페이지

- ② 고객 정치(Client Politics) : 규제편익이 집중되는 소수(고객)는 편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빠르게 정치조직화하여 로비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비용이 분산되는 다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대처하지 못하며 공무원들은 소수 이해집단과 공생적 관계 속에서 포획되어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 인허가, 수입규제, 직업면허등 주로 경제적 규제

2.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해설 :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지만, 특정 제도가 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위기 시에 기존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역사적 우연성을 인정한다. 즉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안정적으로 지속된 제도가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급격히 중단된 이후 새로운 제도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이를 결절된 균형이라 한다. 따라서 특정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2015 비타민행정학 164페이지) 답 : ④

(3) 역사적 신제도론 - 2015 비타민행정학 164페이지

- ② 외부의 충격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 : 제도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는 속성 때문에 대규모 변화가능성은 적지만, 때때로 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위기 시에 기존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역사적 우연성을 인정한다. 즉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온 제도가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급격히 중단되며 이후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어 또 다른 위기상황이 올 때까지 제도의 균형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를 ‘결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또는 ‘평형의 중단’이라 한다.(☐ 금융위기로 ‘금융기관 간 대출자 정보공유’ 제도가 형성)

3.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해설 : ③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①(x) : steering 기능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하며 rowing을 시장(민간)에 이양할 것을 강조한다.
②(x) : 고객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혜만 보려 하는 수동적 객체이므로 수동적 존재이다.
③(o) : 재량이 클수록 통제가 곤란하므로 재량권 확대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④(x) : 내부 및 외부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한다.(2015 비타민행정학 174페이지)

답 : ③

4.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해설 : ②는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료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을 기대한다. 하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은 주인인 시민에게 공무원이 봉사(service : 공유가치의 창출,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의 중재와 협상)할 것을 주문하므로 재량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에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됨을 강조하며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조직구조를 기대한다.(2015 비타민행정학 198페이지) 답 : ②

*** 이론간 비교 - 2015 비타민행정학 198페이지**

구 분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 경제이론 •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 토의	• 민주주의이론 •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합리성모형과 행태모형	• 개괄적 합리성 • 행정인	• 기술적 · 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 전략적 합리성 • 정치적 · 경제적 · 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의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 (시장의 힘을 이용한 촉매자)	서비스 제공과 봉사 (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 협상을 중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 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관리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상호합의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양식	위계적 : 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	시장지향적 : 개인이익의 총합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다면적 :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허용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재량을 허용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 보수와 편익 • 공무원보호	• 기업가정신 •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 공공서비스 •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5.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 분배정책은 정부가 사회의 특정한 부분(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으로서 비용부담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갈등이 적고 집행이 용이하다. ①은 재분배정책의 내용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간 소득이전 정책으로서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2015 비타민행정학 206페이지) 답 : ①

6.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 ① 조세지출
- ② 정부출자기업
- ③ 사회적 규제
- ④ 정부 소비

해설 : 직접성이란 정책수단의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이다. 정부소비, 보험, 공기업, 경제규제, 대출 등은 직접성 정도가 높은 반면 사회규제, 조세지출, 불법행위책임, 계약 및 서비스 구매계약, 대출보증, 보조금, 바우처 등은 직접성 정도가 낮다. ④ 정부소비는 정부활동을 위한 소비행위로서 보기 중 직접성이 가장 높다. ② 정부출자기업의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 정부출자기업인 공기업은 직접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출자기업을 공기업보다 넓게 본다면 직접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다. ③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모두 강제성이 높지만 직접성은 다르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이나 영업 활동 규제를 통하여 정부가 민간의 본원적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반면 사회적 규제는 민간의 본원적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에 부수적인 환경, 안전 등을 규제하므로 직접성이 낮다.(2015 비타민행정학 202페이지) 답 : ④

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해설 : 쓰레기통모형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응집력이 약한 조직(ex. 연구소, 대학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연구한 모형으로서 4가지 의사결정 요소가 마치 4줄기의 강물이 따로 흘러가듯이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①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다. (2015 비타민행정학 259페이지) 답 : ①

9. 쓰레기통모형 - 2015 비타민행정학 259페이지

② 의사결정 요소의 독자적 흐름(표류) : 일반적으로 아래의 4가지 의사결정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쓰레기통모형은 4가지 요소가 마치 4줄기의 강물이 따로 흘러가듯이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 문제의 흐름 :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책문제화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의사결정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흘러 다닌다.
- ㉡ 해결책의 흐름 :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책공동체 등의 전문가들은 해결책(정책대안)을 마련하지만, 의사결정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결책은 혼자 흘러 다닌다.
- ㉢ 참여자의 흐름 : 참여할 정책결정자들은 수시로 참여하며 문제에 대해서 모르거나 결정의 순간까지 해결책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문제, 해결책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닌다.

㉔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 : 의사결정의 기회(회의)가 오더라도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지 않았거나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8.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 ③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의 내용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위임한 형태가 아니라,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장악(주도, 지배)하는 형태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1980년대초 하향식 접근론을 제시했다가 1980년대 중반에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2015 비타민행정학 316페이지)

④ 재량적 실험가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 2015 비타민행정학 316페이지

- ㉔ 의미 : 결정자가 정보·기술·현실여건 등으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형태이다. 집행자는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선택, 정책시행 등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책임회피의 위험성이 있지만,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매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이며, 복잡·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다.

9.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집단의 중시
-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해설 : 분업과 수직적 계층제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고전적 조직이론은 20C 초에 노동조합의 저항과 경제대공황 등으로 인한 저생산성 등에 대하여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한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대두되었다.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고전적 행정학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의 내용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360페이지) 답 : ②

(2) 신고전적 조직이론 - 2015 비타민행정학 360페이지

- ㉔ 의미 : 분업과 수직적 계층제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고전적 조직이론은 20C 초에 노동조합의 저항과 경제대공황 등으로 인한 저생산성 등에 대하여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한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대두되었다.

10.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③ 자원의존이론은 희소한 자원을 획득, 통제, 관리해 나가는 조직 관리자의 역할이나 능력을 강조한 이론으로서 조직을 능동적 존재로 파악한다. ①는 자원의존이론에서 조직간 의존성을 의미한다.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조직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2015 비타민행정학 394페이지) 답 : ③

(4)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 2015 비타민행정학 394페이지

① 의 의

- ㉠ Pfeffer와 Salancik(1978)는 조직이 상황에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제약조건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전략적 조정을 통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원의존이론을 제시하였다.
- ㉡ 희소한 자원과 외부환경조직과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통제·관리하는 관리자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임의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 상황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이 일반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원의존이론은 조직 간 관계인 기업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다.

② 내 용

- ㉠ 조직 간 의존성 : 조직은 필요한 자원들에 대해서 자급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다양한 조직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해설 : ②는 피터(R. Peter)가 제시한 Peter의 법칙이다. 굿셀(Goodsell)은 정부관료제를 옹호한 행정재정립운동을 전개한 학자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364페이지) 답 : ②

* 피터의 법칙(Peter's principle, 1969) - 2015 비타민행정학 364페이지

- 1. 의의 : 승진을 계속 하다보면 능력을 벗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하게 되고 그 직위에서 무능력자가 됨으로써 결국 계층제의 모든 직위가 무능력자로 채워지므로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론이다.
- 2. 시사점 : 계층제의 부작용과 관료제의 병폐를 지적한 이론이다. 즉 개인의 무능력은 개인보다는, 위계조직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2) 관료제옹호론(행정재정립운동, Refounding Movement)- 2015 비타민행정학 430페이지

- ① 의의 : 1980년대 이후 행정과 직업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으로써 관료제에 대한 비판일변도의 분위기와 관료제종언론이 형성되고 업관주의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주된 논거는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학자별 내용
 - ㉠ Goodsell(1985) : 미국 정부관료제는 내부고발제, 대표관료제 등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고, 관료제의 낮은 성과는 무형의 목표 등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며, 관료들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2.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 ④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해설 :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특성(자질 등)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아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전환기에 적합한 리더십으로서 능률지향적, 통제지향적, 안정지향적 관료제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2015 비타민행정학 483페이지) 답 : ①

4. 리더십이론의 발전 - 2015 비타민행정학 483페이지

(2) 특성론적 접근법(trait approach) - 자질이론, 속성이론, 위인(偉人)이론, 1차원 리더십 이론

- ① 의의 : 리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공적인 리더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자질(정열, 용기, 청렴성, 결단력, 창조성, 근면성, 육체적·신체적 특성, 정신적 에너지, 체력, 지적 능력 등)을 과약하는 리더십 이론이다.

③ 변혁적 리더십에 적합한 조직조건 - 2015 비타민행정학 483페이지

- ① 능률지향적인 조직보다는, 적응지향적인 조직에 적합하다.
 ㉠ 조직과 환경의 연계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작용적 구조에 적합하다.
 ㉡ 기계적 관료제·전문적 관료제·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와 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 교환이나 통제위주의 조직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려는 조직에 더 적합하다.

13.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해설 : ④ 엽관주의 인사는 정치적 임용을 중시하므로 선출직인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상관의 국정장악력이 높아짐으로써 공직 통제가 용이하므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킨다.(2015 비타민행정학 553페이지) 답 : ④

(4)엽관주의의 장점 - 2015 비타민행정학 553페이지

- ③ 민주통제의 강화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높아지므로 엽관제는 행정에 대한 민주 통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14.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해설 : ① 직급은 직렬과 등급이 교차하므로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

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589페이지) 답 : ①

2. 직위분류제의 구조 - 2015 비타민행정학 589페이지

- (3) 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곤란도(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이다. 임용자격, 임용시험, 보수 등 인사관리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행정 9급, 세무 9급 등

15.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계속비
-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해설 : ②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를,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가 산하기관을 통제하는 제도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815페이지) 답 : ②

(2) 예산집행의 통제 - 2015 비타민행정학 815페이지

-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예산의 배정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를 통제하는 것이며(예산부족 방지 및 세입축소 시 세출삭감),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을 통제하는 것이다.

16.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해설 : ①에서 경기부양은 경기침체의 대책이기는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2015 비타민행정학 740페이지) 답 : ①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 - 2015 비타민행정학 740페이지

- ㉡ 요건의 제한 :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과 전용 또는 예비비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가 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편성요건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다.
- ㉢ 편성요건(국가재정법 제89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17.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해설 : ④ A는 완전성원칙(예산 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B는 통일성원칙(예산 통일의 원칙 : 모든 세입은 국고로 통합되고 모든 세출은 국고에서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726, 727페이지) 답 : ④

2. 전통적 예산원칙 - 2015 비타민행정학 726, 727페이지

(4) 완전성 원칙 : 의회와 국민의 재정감독을 위하여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포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① 순계예산[총계예산 - 증복부분(회계 간·계정 간 거래)], ②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③ 정부의 현물출자(공기업에 출자), 외국 차관의 전대(轉貸)와 전대차관의 상환,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 국가출연연구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삭제) 등은 세외세출외로 처리 가능, ④ 초과수입의 사용(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5) 통일성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에 통합되고 모든 세출은 그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어떤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특정세입이 직접 특정 세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므로 비영향(non-affection)의 원칙, 목적구속 금지의 원칙, 세입 비지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① 특별회계, ② 기금, ③ 목적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지역자원시설세 등), ④ 초과수입의 사용(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해설 : ③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므로 공공서비스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균질화는 국가나 광역행정의 특성이다.(2015 비타민행정학 896페이지) 답 : ③

(1) 지방자치의 장점(필요성, 효용) - 2015 비타민행정학 896페이지

① 정치적 효용 : ㉠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 민주주의의 훈련장, ㉢ 전제정치의 방파제, ㉣ 정국마비 방지

② 행정적(기술적) 효용 : ㉠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 정책의 지역적 실험(정책의 전국적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의 종합적 실시, ㉣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한 효율행정(결정과 집행의 분업)

③ 경제적 효용 : ㉠ 자원배분의 효율성(일정한 지역에서만 혜택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 행정조직에서 공급), ㉡ 후생의 극대화(중앙정부에 의한 과다 또는 과소공급 방지), ㉢ 소비자 선호의 구현(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선호 중시), ㉣ 지역특수사업의 발전

④ 사회적 효용 : ㉠ 경쟁성과 창의성의 제고, ㉡ 주체의식·책임의식의 함양, ㉢ 다원적 사회의 형성, ㉣ 인구의 균등분산(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

19.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 ④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주민이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대표와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므로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2015 비탄민행정학 957페이지) 답 : ④

(3) 주민소환법 - 2015 비탄민행정학 9567페이지

① 주민소환 대상 : 선출직 공직자로서 ㉠ 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 지방의원(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의원)

- ☐ 주의 1. 비례대표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제외
2. 교육감과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해당)은 선출직이므로 소환대상

20.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소득세
- ② 담배소비세
- ③ 취득세
- ④ 지방교육세

해설 : 자치구 조정교부금(기존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세 중 ‘보통세’로 하므로 목적세는 재원이 될 수 없다. ④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2015 비탄민행정학 991페이지) 답 : ④

② 자치구 조정교부금(기존 조정교부금) - 2015 비탄민행정학 991페이지

㉠ 의의 : 국가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제도(수평적 재정조정)로서, 특별시·광역시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조정교부금제의 운영권한은 특별시·광역시에 있으며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다<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신설)>.

㉡ 교부방법 :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재원부족액을 교부하므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켜주는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의 산정방법은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지만, 산정요소 중에서 구체성과 신축성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재원은 ‘보통세’로 하며,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은 각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므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 ☐ 서울시 50%, 대전시 68% 등).